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합의...규모는 여전히 이견

여야 3+3 회동, 부족분 지방채 발행...이자는 정부 보전키로 새누리 기업 법인세 인상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 제시

내년 예산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12일 이후 기능을 멈췄던 국회 교문위도 정상화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 재정지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에 국고에서 5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2000억원 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 12일 이후 소관 부처 예산심의가 중단된 국회 교문위를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하고 예산 및 법안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 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동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3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편성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5233억원에서부터 2000억원 사이에서 정해(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대략 5233억원과(지방채 발행에 따른) 신규 이자분에 대해 교육부와 기재부 간에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조정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담뱃세 인상과 관련, 야당은 법인세 인상 없는 담뱃세 인상은 불가하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R&D(연구개발) 투자나 고용확대, 신규투자 촉진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이외의 주제라면 전향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R&D 투자나 고용확대, 신규투자 부분 등을 제외한 비과세감면 보완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여당이 부가조세 철폐 논의는 성역으로 놔둔 채 서민 갈취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담뱃세 등 '서민중세 6대 법인'으로 연평균 약 6조원의 세금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모처럼 웃음꽃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합의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수능 출제 방식 재검토해야"

방산비리 엄단·규제 개혁·예산안 조속 처리 요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연이은 오류사태와 관련,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현되도록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능 시험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불거진 방산 비리 등에 대해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하는 만큼 조속히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야겠다"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신설부처가 이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 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중인데 세계가 인정하는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이 경제회생과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성장전략이 최근 G20(주요 20개국)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을 언급하며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 각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들을 실천해 3년 후에는 성과도 1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경품행사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행사기간: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격대상자경품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즉석복권기념품 포함)

선물1

(계약시 경품 응모권 증정)

1등	2등	3등
황금열쇠순금상 (1명)	가전제품 100만원 상품권 (2명)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 (동반 1인 포함)(3명)
	4등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5등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 중복 당첨시 상위 품목으로 증정, 제세공과금 본인부담

선물2

(기념품(택1))

[핸드크림] [치약세트]

선물3

(계약시 즉석복권 증정(100%당첨))

[통장지갑] [클라스락 밀폐용기세트] [세라믹코팅 냄비]

* 상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일(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자격기준

- 출자금 10만원 이상 입금고객
- 자동차세 3천 이상 신규자
- 정기예금 1,000만원 이상 가입고객
- 체크카드 신규자(1회이상 이용고객)
- 대출 1,000만원 이상 실행고객
- 생명공제,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 전자금용 신규자

* 경품추첨일까지 정상유지 및 이용 거래자
* 상기 자격기준은 회원에 한함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062)223-8007, 232-7251 대인동 한미쇼핑 1층
충장지점 : 062)223-7217, 223-7218 충장로 5가 입구

세월호 참사 배·보상 논의 본격화

여야 TF 회의 피해구제 범위·심사위 직제 등 놓고 입씨름

여야는 2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으나 '배상이나 보상이나' 문제와 배·보상 지원 심사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경대수·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유성엽·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여하는 TF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지원 범위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 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에 무게를 실은 반면,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구조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야당은 정부의 책임에 대해 배·보상 범위를 결정할 심의위원회에서 이 책임성을 가리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은 피해에 대한 범위는 사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정부의 책임을 놓고 야당은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여당은 표현과 내용을 완화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구제의 범위를 둘러싸고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선례와의 형평성을 지켜야 하는 범위에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야당은 범위가 결정하는 손해배상·손실보상에 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보상 심사위의 직제를 놓고도 이견이 드러났다.

앞서 세월호특별법 TF는 피해자 및 피해지원 배·보상 분야 협상에서 배·보상 심사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자고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이날 정부 측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배·보상 심사위를 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 산하에 두는 것이 맞다고 피력한 반면, 야당은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해수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만큼 총리실이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6일 오전 세월호 배·보상 TF를 다시 가동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